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북 관계 전망

최 춘 흠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5월 5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신화사 통신은 이전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끝나는 시점인 5월 7일 방중 사실과 중·북 정상회담 존재자체를 발표하였으며 북한은 5월 9일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북 정상회담은 여러 모로 이전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대중 저자세외교가 나타났고, 셋째, 중·북 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이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북 정상회담 내용을 검토, 향후 중·북 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I. 방중 배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불러들인 중국

방문시점에서 볼 때 중국 혹은 북한 중 어느 국가가 더욱 시급하였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요청은 이미 1년 전부터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와 구두친서를 통해 재차 확인되었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편한’ 시간대는 아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엄격한 보안과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자신의 방중 특히 자신의 건강상태가 그대로 노출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방중한 데는 그만큼 중국이 강력히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6자회담 재개가 예상치 못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해 아주 지연될 것이 우려하여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중국에 와서 6자회담 참여 의사 표명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시급성이 존재하였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소행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규명한 다음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겠다는 “先천안함 원인 규명, 後6자회담”이라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더군다나 금년 4월 말 상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중국 측에 제시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천안함 침몰로 인한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명하였다.

II. 중·북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동의하지 않은 부문이 많은 정상회담

5월 5일에 개최된 중·북 정상회담은 실질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중국이 5월 7일 중·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이를 뒤인 5월 9일에 가서야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였다. 왜 그랬을까? 서로 동의하는 것보다는 동의하지 않은 부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북 양국 간에 6자회담의 북한참여 조건, 천안함 침몰 사건과 남북한 긴장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 중요한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정된 후진타오 주석과의 연극 관람조차 취소한 것이다.

중국의 대북 개입이 증대된 정상회담

5월 5일 개최한 중·북 정상회담에 대해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북은 양국의 내정과 외교상의 중대 문제, 국제사회 지역의 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실로 중국의 대북 개입 증대를 확실히 보여주는 언급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으면 양국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언급하고 자국의 내정불간섭원칙은 절대불변임을 대내외에 자랑하여 왔다. 그러던 중국이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처음으로 이번에는 북한 정상과 함께 내정의 중대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중국이 자랑하던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인 내정불간섭 원칙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북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음에도 내정의 중대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중국이 내정 중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식이 되지 않으면 무상 지원할 수 없음을 강력히 표시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후계자 문제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상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인가?

우선 북한이 후계체제 문제에 대해 중국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중국은 북한의 후계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북 정상이 합의한 “세대를 통한 양국관계 발전” 언급은 전통적 관계 발전을 의미하는 내용일 뿐이지 김정일 후계체제를 지지한 언급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정 중에서 무엇을 중국은 지적하고 싶은 것인가? 중국은 북한의 내정이 안정되지 못해 북한의 국가존립 자체의 안정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중·북 양국의 공동협력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대북 경제지원에는 정치적 요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린 셈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마다할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중국에게서 경제 및 정치적 지원을 원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의 중대 내정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북 정치관계는 험난해 질 소지를 안게 되었다.

진전된 6자회담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정상회담

중국은 6자회담과 관련 북한에게서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의사 외에는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언급을 받아내지 못했다. 아울러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어떠한 확신도 중국에 주지



못하였다. 너무나 원론적인 북한의 표명에 그동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공을 들인 중국은 크게 실망하였을 것이다. 북한 역시 선린 우방국인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개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방식의 언급이 포함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신화사통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중국의 입장인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한다는 문구조차 삽입하지 못하였다.

III. 중·북 관계 전망

중·북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북 정치·안보전략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예상하기 어렵다. 또한 남북관계는 현재와 같은 교착 및 대립적 국면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중심의 북한 정세 관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3년 취임 직후 대북 경제협력 확대 및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표방하고 대북 교류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2차에 걸쳐하는 바람에 중·북 관계는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 폐기에도 실질적인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즉 중국 외교 전략의 leadership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2년 남짓 남은 후진타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로 불안해진 북한 내부정세의 안정과 김정일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북한의 안정화를 위한 경제협력관계에 역점을 둘 것이며,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압력행사에는 더욱 주저할 것이다.

중 북 정치·안보 전략적 관계 발전의 제약 증대

중국이 내정문제에 대한 협의를 북한에 거론함으로써 중·북관계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원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따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개입 전략은 한계를 지니게 되고 중국의 대북 접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지연과 남북관계 교착 지속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속될 것이며 6자회담은 금년 하반기에 가서야 개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나 자신의 강한 영향력 행사는 꺼리기 때문에 6자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의 교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